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-

2023. 1. 12.



산림청

순서

I . 추진성과와 평가	1
II 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 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	5
① 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비	5
②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돈이 되는 경제임업 육성 ..	7
③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사회임업 확대 ·	9
④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활성화	11
⑤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지구촌과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..	13
IV 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	15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- (산림재난) 대형화되는 산불, 산사태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 안전 확보
 - 울진·밀양 등 대형 산불을 교훈삼아 ‘초대형 산불대책’* 마련(‘22.10) 및 초대형 산불헬기, ‘산림재난통제관실’ 확충(‘22.12) 등 대응체계 고도화
 - * 내용: 산악기상망 등 활용한 예측강화, 산불진화임도 등 대응역량 확충,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
 - 철저한 대비로 백년만의 기록적 집중호우 불구, 산사태 인명피해* 예방
 - * (‘12~’21 평균 산사태 피해) 260ha / 1.8명 사망 → (‘22) 327 / 0
- (경제) 규제개선, 소득안전망 확충 등 임업인 산림경영 활성화 지원
 - 현장토론(15회) 등으로 산지이용 등의 규제를 발굴(227건), 개선*하고 ‘임업직불제’로(‘22.10 시행) 임업인 평균소득 4.5%(167만원) 증가 전망
 - *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 지원 가능지역 확대, 산양삼 재배 임대제한(20년) 폐지 등 83건
- (사회) 생애주기 산림복지 강화로 이용인구 24% 증가(‘21: 1,894만명→’22: 2,346만)
 - 치매 등 질병예방에 산림치유를 접목하고(복지부 협업), 전국규모 ‘동서 트레일’ 착공(‘22.10), 제2호 국립수목장림 개장(‘22.11) 등 국민수요 충족
- (환경) 탄소중립,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산림활용 확대
 - 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탄소저장을 늘리고*(25%), 기후위기 대응 기업ESG확대(삼성전자, 신한카드) 및 ‘UN산림기후 정상회의’(‘22.11) 주도
 - *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(탄소저장량) : (‘21) 827천톤(870천톤) → (‘22) 1,027천(1,088천)

2 개선 필요사항

- 2배 이상 급증전망(‘22 대비)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방제 시급
 - 지자체, 민간전문가 협조 강화와 드론예찰, QR코드 등 과학·기술을 활용한 총력 예찰·방제(~’23.4)로 추세전환* 골든타임 확보 필요
 - *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추이 : (‘14) 218만그루 → (‘22) 38만 → (‘23전망) 78만

II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- (비전) '23년은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국토녹화가 50년 되는 해로, 산림의 부흥을 향한 산림 100년 비전을 제시할 때

☞ 산림이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,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'산림르네상스 시대'를 본격 추진

- (재난) 50년만의 가뭄과 이상고온이 겹쳐 '22년 대형 산불이 전년보다 5배 급증(2건→11)하는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

☞ 법·제도 정비와 첨단 과학·기술 접목 확대로 예방·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, 유관기관 협업강화 등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

- (경제) 저성장 극복을 위해, 식재 후 41년 이상 된 수확기 나무가 59%(25)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을 경제자원으로 활용할 필요

☞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고, 임산업을 경쟁력 높은 미래 융·복합 산업으로 육성하여 임업인이 산에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

- (사회) 국민의 76%가 찾는(21) 숲을 국민의 건강자산으로 육성 필요

☞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, 의·과학 및 건강정책과 연계 강화

- (환경) 산림의 탄소감축 비용(\$6/tCO₂)은 자동차(\$96)의 6%로(13, 맥켄지) '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%(32백만tCO₂)를 담당하는 고효율 탄소중립 수단

☞ 기업·임업인 등 다양한 참여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·복원하고 도시숲 등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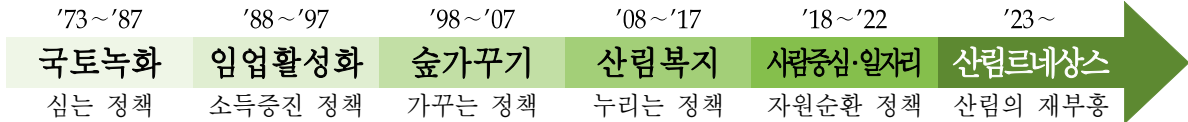
- (국제) 우리나라는 녹화성공국으로서 그린ODA 확대를 천명(22, UN)

☞ 국제산림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 제시와 산림협력 확대로 산림을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주요 브랜드로 육성

< 국토녹화 50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>

□ 추진경과

○ 시기별 추진경과



- '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(FAO, '82)', '한국의 조림사업은 세계적 자랑거리(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, '08)' 등 평가 다수
- 제15차 세계산림총회('22.5, 서울), UN산림기후 정상회의('22.11) 등에서 우리나라의 산림협력 지평 확대

□ 주요성과

- 산림의 절반인 289만ha에 69억그루 조림으로 국토녹화 금자탑 이룩

주요지표	과거		현재
나무의 양(임목 축적)	11m ³ /ha ('72)	(15배)	165m ³ /ha ('20)
임도 밀도	0.01m/ha ('72)	(380배)	3.8m/ha ('21)
산림의 공익가치	18조원 ('87)	(12배)	221조원 ('18)
산림 ODA 국가	1개국 ('06, 몽골)	(51배)	51개국 ('22)
산림복지이용인구	12백만명 ('72)	(1.9배)	23백만명 ('22)

□ 향후계획

- 국토녹화 50주년 기념식 및 '산림 100년 비전' 선포(식목일 연계)
-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, 그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, 미래 여건 분석에 따른 향후 '73년까지의 산림비전을 선포*

* 부대행사 : 산림 비전 국제컨퍼런스 개최,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발표, 다큐멘터리 제작 등

< 국토녹화 50주년 기념식 컨셉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미래 신기술 접목한 산림관리 | 2. 잘 키워낸 산림으로 국민에게 혜택 제공 |
| 3. 그린ODA 등 국제협력 활성화 | 4.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산림 |

-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(상반기 문화재청 공모)

2 2023년 산림청 업무추진 개요

비 전

선진국형 산림경영·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

목 표

산림의 경제적·환경적·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

- 산불·산사태 인명피해 ○ 목재산업 규모 ○ 산림복지 이용인구
- (5년평균) 3.4명→('23) 0 - ('20) 48조원→('23) 50조 - (5년평균) 2,005만명→('23) 2,400만

5대 전략

11대 세부과제

1. 산불, 산사태,
산림병해충의 3대
산림재난에 선제적 대비

-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
- 산사태 대응체계 고도화
- 산림병해충 피해 예방

2. 목재이용 증진과
임가소득 향상 등
돈이 되는 경제임업 육성

- 산림 100년 기반 조성
-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

3.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
활성화로 국민부담을
줄이는 사회임업 확대

-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
- 지역기반 산림복지 확대

4. 생물다양성과
탄소중립에 기여하는
환경임업 활성화

-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
- 산림생물다양성과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·보호

5. 국토녹화 성공경험을
지구촌과 공유하는
국제협력 전개

- 그린ODA 등 국제산림협력 강화
- 해외산림진출 확대 및 남북산림협력 준비

Ⅲ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

① 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비

- ◆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,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, 산림피해를 최소화
 - '22년에 이어 '23년에도 산불,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0명
 -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 : ('23전망) 78만그루 → ('24목표) 10만 이하

[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]

- (예방·감시) 전국 278개 기관 '산불방지대책본부'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
 -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하고,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·장기 예보*까지 서비스 확대
 - * ('22) 단기 3일전 예보 → ('23) 중기 7일전, 장기 1개월전 예보
 -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(34%)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(181만ha, 27%)와 등산로 폐쇄(6,765km, 24%) 조치*
 - * 입산통제 정보 웹서비스(산림청 홈페이지, 네이버 포털 지도)를 통해 제공
 - 소각 산불(산불의 27%) 방지를 위해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는 소각행위 금지 및 감시인력(22천명), 드론감시단(32개단) 운영으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
- (진화·대응) 고성능 장비 확충 및 국가 주요시설 초동진화 태세 구축
 - 고성능 진화차 도입(18대) 및 산불진화 헬기를 초대형 중심*으로 전환하고,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한 범부처 안전관리 협업·연계 시스템 구축
 - * '23년 헬기 추가 도입 추진 : 4대(초대형 2, 중·대형 2)
 - 원전, LNG, 정유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(146천개소) 인근 산불 발생 실시간 관제·공유 및 「산림재난방지법」 등 법·제도 강화
- (기반시설) 산불진화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
 - 산불발생 시 방화선 역할, 진화인력·차량 진입로 활용 및 야간산불 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 확충(262km)
 - 산불에 취약한 단순 침엽수림, 생활권 주변 등에 내화수림대(351ha) 조성하고, 산림 내 임목밀도 조절 등 산불예방 숲가꾸기(17천ha) 확대

[산사태 대응체계 고도화]

- (예방) 취약지 점검, 예방시설 확충과 부처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
 -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(55천개소)* 점검과 생활권 사방사업**을 우기(7월)전에 완료하고 다목적사방댐(4개소)을 신설하여 산림재난에 대비
 - * 취약지역(26,923), 산불피해지(104), 태양광허가지 점검(2,881), 우려지 조사(2.52만)
 - ** 사방댐(636개소), 산지사방(200ha), 계류보전(322.5km), 다목적사방댐(영덕^{국유림}, 울진, 단양, 인제)
 - 산사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산지전용(산림청), 급경사지(행안부), 도로비탈면(국토부)과 같은 범정부 사면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* 추진
 - * 관계부처 합동 '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'에 반영 추진 중
- (대응) 신속·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주민 대피 가능
 - 실시간 기상상황을 반영하여 산사태예측정보를 48시간 전에 제공('22: 24시간 전)하고 '예비특보'*를 도입하여 대피 골든타임 확보
 -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, 등산로 통행제한 등 피해예방 조치
 - * 산사태 예측정보를 산사태 예보(1~12시간 전)와 예비특보(24~48시간 전)로 세분화

[산림병해충 피해 예방]

- (소나무재선충병) 선제적 예찰과 방제 총력 대응으로 확산 조기 차단
 - 피해유형별 맞춤형 방제*로 감염·우려목(185만그루)을 4월 전까지 전량 방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저감
 - * ▲피해심각: 모두베기 ▲피해경마: 소구역베기+나무주사 ▲1년 이상 미발생: 나무주사
 - 인공지능을 융합한 피해 확산 예측 시스템 개발('22~'24)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확산 경로 예측하여 추가확산 저지
- (일반병해충) 도시권 등 혐오해충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불편 해소
 - 대벌레, 매미나방 등 생활권 혐오해충도 산림병해충 예보대상에 추가하여 집단발생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, 선제적 방제로 피해 최소화
 - * (기존)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→ (개선) 산림병해충 + 생활권 혐오해충

2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돈이 되는 경제임업 육성

- ◆ 국토녹화로 푸르고 울창해진 우리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 강화
 - 목재생산량 확대('22: 450만㎥ → '23: 500만)로 목재산업 규모 50조원 달성
 - 임업직불제('22: 2.8만명 → '23: 3만), 산지연금 확대(+73%)로 임업인 소득 5% 증가

[산림 100년 기반 조성]

- (정책)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미래 비전·전략 수립
 - 국토녹화 50주년 성과 재조명 및 첨단·기술의 '산림 100년 비전'* 선포
 - * 과거 5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,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 미래 50년을 이끌 비전·목표 제시
 -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'제6차 산림기본계획('18~'37)'^{*} 변경
 - * 인공지능·디지털 활용 산림재난대응, 산림경영 기반구축, 목재이용 활성화 등 중점 반영
- (산림경영) 경제림 중심의 경영으로 원목 수요의 60%('21: 56%) 공급
 - 산림의 기능·목적에 고려하여 나무심기(22천ha), 숲가꾸기(223천ha)를 하고, 친환경 벌채 소득 보전으로 새로운 목재수확제도*(6월 시행) 안착
 - * 목재수확 최대면적 축소(50ha → 30), 수림대폭 확대(20m → 40), 목재수확 타당성조사(10ha 이상) 등
 - 경제림육성단지(202만ha), 선도 산림경영단지(29개소) 중심으로 임도(1,029km) 신설 및 차별화된 규제개선으로 목재공급 기지로 육성
- (경영지원) 임업인의 자유로운 산림경영을 촉진하여 임가소득 4천만원 돌파
 - 임업인의 경영제약 해소를 위해 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(227건)와 세제*를 신속히 정비하고, 지속적으로 개선과제 발굴
 - * 양도소득세 자경산지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,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
 - 전문임업인 지원을 위한 「사유림경영법」 개편* 및 보조·융자** 개선
 - * 현행 「임업진흥법」을 개편하여 단기소득 경영특례, 경영관리시설 기준 등 규정
 - ** ▲보조: 작업로 위험구간 포장,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등 ▲융자: 임야매입 융자 확대 등
 - 산지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*하여 '임업용산지'에서의 산림경영 지원
 - * (현행) 보전산지, 준보전산지 → (개편안) 공익용산지, 임업용산지, 준보전산지

- (안전망) 임업직불금, 재해보험, 산지연금 확대 등 임업인 소득안전망 확충
 - 임업직불제 지급확대를 위해 요건을 농업 등 유사제도 수준으로 개선하고,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확대(두릅 등) 및 임목재해보험 도입 추진
 - * 연간 종사일수 / 임산물 판매액(주업) : (현행) 90일 / 1,600만원 → (개선) 60 / 900만
 - 영세 산주를 위한 산지연금 확대('22: 44억원 → '23: 75억) 및 제도* 개선
 - * 매수 기준단가 상한선 삭제, 공유지분 매수제한 해제, 선지급금 비율 상향(20% → 40) 등

[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]

- (목재산업) 법률, 제도 마련으로 목재산업 50조원 시대('20: 48조원) 견인
 - 대규모 국산목재 이용모델인 '산림·목재 클러스터'* 구축(1개소)
 - * 목재가공바이오매스센터 구축, 임도기계화 등 목재산업 활성화로 직간접편익 연 166억원 창출
 -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「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(상임위 소위계류 '22.11.10)」, 「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'* 등 도입
 - *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산림청장이 국산목재제품 확인 및 '한목'표시로 브랜드화
 -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과수목 가지치기 부산물 등을 추가하고 (총 7종) 에너지원으로 공급*하여 농·임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
 - *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(탄소저장량) : ('22) 1,027천톤(1,088천tCO₂) → ('23) 1,200천(1,278천)
- (임산물) 국산 청정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
 - 청정임산물 생산·가공·유통시설 현대화 및 단지화 추진*(47개소)
 - *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(42개소), 가공산업활성화(3개소), 수출특화시설(2개소) 등
 - 유럽 등 신흥시장 개척과 신규·유망품목* 발굴, 기업지원으로 수출 촉진
 - * ▲(신규 주력품목) 산양삼, 오미자 등 ▲(유망품목) 표고버섯(이슬송이), 곤드레 메밀국수 등
 - 산림생명바이오자원을 활용하는 가공·생산·유통 '스마트가공단지' 조성(1개소)
- (첨단화) 실용적인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접목으로 임업을 미래 융·복합 산업화
 - 산림자원으로 기능성 원료,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연구(58과제)와 바이오혁신 기술개발*(예타중) 추진
 - *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및 대량공급기술 개발로 산업화 매출액 1천억원 기대
 -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'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'* 구현 착수
 - * 농림위성,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체계, 디지털트윈 산림 등을 활용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화

③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사회임업 확대

◆ 국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에서 배우고, 즐기고,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

○ 산림복지이용인구(산림치유*) : (5년평균) 2,005만명(28만명) → ('23) 2,400만(40만)

* 미국, 영국 등은 산림치유 등 산림과 보건·의료를 연계하여 의료비 절감 시도

[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]

□ (산림치유) 국민 건강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·의료 연계 및 접근성 향상

○ 질병예방·재난회복 지원, 고령화·저출산 대응 등에 산림치유* 활성화

* ▲ 재난심리회복 산림치유(행안부 협력) ▲ 난임부부 숲체험, 숲태교(복지부 협력) ▲ 치매 예방 산림치유(중앙치매센터 협력) ▲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산림치유(건강보험공단 협력)

○ 산림치유의 의·과학적 효과*를 검증하고, 건강증진 산림치유 기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'스마트 헬스케어 R&D' 추진('21~'25)

* 숲의 건강효과 연구사례 : ▲ (미국, '17) 어린이 ADHD 치료비 2.3억달러 감소효과
▲ (영국, '20) 연간 의료비 21억 파운드 절감효과

○ 국민이 산림치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국립 치유의 숲 개장 (화순, 부산) 및 장기체류형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(진안, ~'24) 조성

○ 도시지역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기준요건* 개선

* 도시지역 치유의 숲 조성 최소면적 요건을 50ha에서 5ha로 완화(법제처 사전심사 중 '22.9.28)

□ (휴양) 야영, 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산림휴양시설 확대(65개소)

○ 국민의 건강·여가 수요를 반영하여 장거리 동서트레일(316km: 국·42/공·사 274), 국가숲길(2개소), 자연휴양림(5개소), 숲속야영장(5개소) 등 확충

○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레포츠·등산문화를 위한 권역별 지원기반* 조성

* ▲ 국립등산학교: 남부(밀양, ~'23), 중부(공모, ~'25) ▲ 국립산림레포츠센터: 남부(문경, ~'25), 동부(공모, ~'26)

○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권역별 국·공립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하고(11개소),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* 추진

* '조성계획 승인'을 '지구지정' 단계에 포함하여 인·허가 소요기간 단축(5년→2)

- (교육·문화) 산림의 가치와 문화를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
 - 유아의 안전한 숲교육을 위한 국·공립 유아숲체험원(40개소) 조성 및 청소년의 생태감수성 증진 '학교로 찾아가는 숲 교육' 추진(80개교)
 - 가치 높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('22: 87개 → '23: 93)하여 지역 명소화(3개소)하고 인문학·예술 등을 융합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확산
- (서비스) 민간 산림복지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이용기회 확대(20%)
 -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및 보수교육 강화(39개 과정, 12천명) 및 유망사업 발굴*(14건)로 산림복지 민간시장 확대
 - * 아동돌봄 서비스와 유아숲교육 결합, 중·장년대상 산림헬스트레이닝 모델 등
 -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장애 이용환경을 조성(나눔길 16개소, 도시숲 8개소)하고,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규모와 대상* 확대
 - * ▲규모: ('22) 5만명 → ('23) 6만 ▲대상: (기존) 기초생활장애수급자 등 + (추가) 한부모가정

[지역기반 산림복지 확대]

- (정원)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녹색복지기반 조성
 - 실내·외 정원(118개소), 스마트가든(296개소) 등을 조성하고 생활권 식물관리를 위한 수목진료(3만개소) 및 찾아가는 반려식물클리닉* 시행
 - * 차량(2대)를 활용한 이동형 진료 및 백두대간·세종수목원, 온라인 등에서 서비스 제공
 -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실내형 정원모델(3유형)을 보급하고, 정원치유 확산 및 '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*'의 성공적 개최 추진
 - * ▲'23.4.1~10.31(개막식: 3.31) ▲주제: 정원에 삽니다 ▲목표: 30개국 8백만명 이상 참여
 - 산림 등 지역자원과 정원을 접목한 '정원도시' 도입(해남) 및 시범사업* 추진
 - * 사업유형: 확장·연계형, 도시활력형, 농어촌·도시권역 구축형, 특수목적형 등
- (산촌) 이색적인 산촌의 경관을 활용한 산촌관광과 산림복지 확대
 - 경관우수 국유림 관광자원화(2개소), 산촌관광 콘텐츠개발(4개소) 등 추진
 - 임업인이 임업경영과 산림휴양, 체험 등을 함께 제공하는 '숲경영 체험림'(6월 시행)을 도입하여 산촌을 산림복지 거점으로 육성

4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활성화

◆ 생물다양성 증진, 탄소중립, 쾌적한 국토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보전·보호 강화와 녹색 공간 조성 확대

○ 국민 1인당 도시숲* 13m²을 제공('19: 11.5)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

* 도시숲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40.9% 저감하고, 여름 한 낮 평균기온 3~7℃ 낮춤

○ 기업의 탄소감축 부담 완화*를 위한 산림 탄소흡수량 활용방안 확대

* 국내 산림은 약 7천억원의 탄소배출권에 해당하는 3,343만tCO₂ 흡수('23)

[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]

□ (도시숲)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1인당 도시숲을 13m²로('19: 11.5) 확대

○ 도시열섬 완화, 탄소저장,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운동장 내 숲 조성(숲운동장), 수직·벽면녹화 연구 등 다변화

* 기후대응도시숲(175ha), 도시바람길숲(17개소), 자녀안심그린숲(80개소), 국유지도시숲(30ha) 등

○ 도시숲 품질제고를 위해 기능별 도시숲* 조성·관리지침을 마련하고, 기 조성 도시숲('19~'22 조성 493개소)의 관리실태 전수조사

* 기후보호형, 경관보호형, 재해방지형, 역사문화형, 휴양복지형, 미세먼지저감형, 생태계보전형

○ 가로수의 기능 극대화를 위해 법규·매뉴얼 정비*, 지자체 담당자 전문교육, 점검강화, 시민참여 협의회 운영 등 국가역할 강화

* 가로수 생육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, 가지치기 유형별 활력도에 따른 관리 반영

□ (생태복원)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백두대간, DMZ,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

○ 보호구역 산불피해지, 식생쇠퇴지 등으로 산림생태복원 사업대상* 확대

* 산림생태복원 면적 : ('22) 141ha → ('23) 291

○ 기후대 및 생육조건을 고려한 자생식물 종자이동구역*을 설정하고 종자인증·공급센터(1개소) 신설·운영으로 자생식물 종자산업 육성

* 식물분포·토양 등을 반영, 전국을 온대북중남부 및 난대로 구분하고 구역 내 종자수집·증식

○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 복원 모습을 예측하는 복원 시뮬레이션 기술개발로 과학적인 산림생태복원을 추진하여 복원 효과 극대화

[산림생물다양성과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·보호]

- (보호종) 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·증진으로 생태계서비스 제공 확대
 - 고산침엽수 등 기후변화 취약 식물(130종) 관리강화로 종 다양성 유지
 - 보호수 안전·생육진단(3천그루) 및 후계목 육성 등 문화자산 보전·확산
 - 기후·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*하여 권역별 희귀(571종), 특산(360종) 식물 수집을 확대하고 복원소재 공급 및 산림생명자원 활용 지원

* ▲해안: 새만금수목원(~'27) ▲난·아열대: 난대수목원(~'31)
- (보호구역) 규제에 따른 보상책 강구 및 보호지역 대체 수단 발굴
 - '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'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유재산권을 제약받는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인센티브 환원(약 200억원/년 추산)
 - 산림 내 OECM* 지정을 위한 「산림보호법」 개정 및 사찰림 식물상 조사(5개소)로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산림 발굴 및 보전 확대

* OECM: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적인 비(非) 보호지역으로 자연휴양림 등이 해당
- (보전기반) 기술 활용, 기업협력 확대로 생물다양성 정책기반 확충
 - '산림생태지도' 제작으로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적응 지원
 - 인공지능, 산림드론감시단(323대)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산지 훼손실태, 불법행위 등 산림 위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제고
 - 탄소중립 등 산림분야 기업 ESG경영을 활성화하고,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, 해외탄소시장 등과 연동 추진
- (산림경관) 통합적인 산림경관 관리로 경관증진, 재해예방 도모
 - 국가산림경관 자원을 도시경관, 산림재해와 연계한 통합관리* 추진

* (기존) 생태경관보전지역 2,948ha(임야 2,674), 경관관리지역(10개소) + (확대) 도시, 재해우려지 등

 -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'복합 산림 경관지도'* 시범 구축

* 경관, 재해 조망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, 도면화한 지도(시스템) 구축('23~'25)

5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지구촌과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

- ◆ 국제 산림부문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,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추진
 - 산림 ODA*를 53개국, 1,118백만ha 대상(전 세계 산림의 27.5%)으로 확대
 - * ('22) 51개국 대상 → ('23) 53(온두라스, 엘살바도르 신규)
 - 국가온실가스 감축기여 대규모 REDD+ 개시(라오스 100만ha, 5.5만tCO₂/년)

[그린ODA 등 국제산림협력 강화]

- (비전제시)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략·모델 수립
 - '제2차 국제산림협력전략('23~'27)*을 수립(3월)하여 40여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산림협력 적극 추진
 - * 우리나라의 우수 산림정책 및 산림르네상스 계획을 바탕으로 협력사업 및 의제 발굴
 - 국토녹화 성공 등 50년 간 축적된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체계화한 산림협력 모델(산림재난대응, REDD+)을 개발하고 세계화 추진
- (협력) 산림으로 함께 번영하는 양자·다자협력 네트워크 확대
 - 동티모르 등 신규 양자 산림협력 국가를 확대하고, 국가·대륙별 중점 협력분야*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발전 도모
 - * ▲아시아: 건조지 복원 ▲아프리카: 사막화 방지·복원 ▲중남미: 혼농임업 등
 -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의 '아시아경관파트너십'* 활성화 지원 및 유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전략적 다자 산림협력 확대
 - * 아시아 지역의 건조지 및 가뭄취약지역 1천만ha 경관복원과 역량강화 등 목표(~'32)
- (ODA)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추진
 - 인공위성을 활용한 '한국형 디지털 산림관리' 등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기술과 경험을 확산*하는 산림ODA 확대('22: 188억원 → '23: 196억)
 - * ▲산불대응: 몽골, 인도네시아 ▲산림휴양: 캄보디아 ▲산림복원: 베트남, 타지키스탄
 - ▲산림자원 현황조사 및 산림탄소 인벤토리 측정 고도화 : 수리남 등 열대림 국가
 - 세계산림총회 성과발전과 글로벌 공조강화를 위한 ODA개발* 확대
 - * 산림재난관리(FAO 협력), 개도국 생물다양성 취약 모니터링(UNEP 협력), REDD+ 역량강화 등

[해외산림진출 확대 및 남북산림협력 준비]

□ (REDD+) 국외감축원 확보('30: 5백만CO2)를 위한 REDD+ 확대 및 기반구축

- 라오스 등과 준국가 수준의 대규모 REDD+ 사업*을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한 ESG경영 연계 및 대상국 협력 확대

* REDD+(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) : 개도국 산림전용·황폐화 방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유엔은 준국가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권장

- 가봉, 페루 등 국외탄소감축량 확보 잠재력*이 높은 국가와 신규협력 추진

* ▲가봉: 13백만톤('18, '30년 국외감축목표 39%) ▲페루: 77백만톤(추산, '30년 국외감축목표 230%)

- 「해외산림탄소감축법(상임위 회부 '22.11.1)」 제정 등 법·제도 기반 구축

* 종합계획 수립, 실태조사 실시,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

□ (해외산림) 합법벌채된 목재의 교역촉진과 해외산림개발 활성화 지원

- 수입목재 합법성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*하고, 산업현장 소통강화와 '임산물교역정보시스템' 등 운영기반 고도화로 조기정착 도모

* (기존) 원목, 제재목류, 합판, 펄릿 + (추가) 단판, 성형목재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펄프

- 국내기업의 해외산림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투자 정책 자금 지원 대상*을 확대하고, 기업융자 심의 기간 단축(1개월)

* (기존) 목재생산을 위한 나무심기 비용 지원 + (추가) 숲가꾸기 비용과 비목재 임산물 지원

□ (남북협력) 남북산림협력 본격화에 대비한 빈틈없는 협력기반 마련

- DMZ, 접경지역 '그린평화지대화'를 위한 산림재난 공동대응 등 추진*

* DMZ 산림항공관리소 및 산악기상망 구축, 산림병해충 모니터링, 야생화벨트 시범조성 등

- '남북산림협력센터'별 특화된 운영*으로 협력자원 및 기술역량 확보

* ▲파주: 스마트양묘 기술 ▲철원: 산림병해충임농복합경영 연구 ▲고성: 고산수종 양묘기술

- 남북산림협력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·민간 협력사업* 확대

* 산림병해충 천적(먹좀벌) 방사, 임농복합경영 모델 구축, 식·약용 재배 기술 확보 등
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

1 규제혁신

□ 현황

-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·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시급(새 정부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구성, '22.6.28)

* TF구성 : 차장(단장) 및 산림경영, 산지이용 등 7개 업무분야 민간전문가 참여

- 임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추진* 중(277건의 건의 중 227건 수용)

* 임업인 현장간담회(15회) 및 214개 협·단체를 통해 227건(법 51, 시행령 29, 시행규칙 12, 행정규칙 22, 행정조치 등 113)의 건의사항 발굴

□ 중점방향 : 경제적 파급효과, 현장애로 중심의 규제개선에 집중

- ① (산지이용 합리화) 입지규제 등 신산업, 임·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혁파*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신속 창출

* 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,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(3만㎡→5만), 풍력 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기간 확대(20년→30) 등

- ② (진입장벽 완화) 사업등록, 자격완화 등 업계 진입문턱을 낮추고 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요인인 세제를 집중 발굴·완화

*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(2명→1), 사립휴양림 음식점 바닥면적 기준 완화(200㎡→600), 임업분야 세액(취득세, 소득세 등) 감면 등

- ③ (임업경영 여건 개선)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원과제를 집중 발굴*하여 경제임업 실현

* 임산물 판매 안테나샵 개설, 임업용 면세유 지급품목 확대, 국유림내 양봉 허용 등

- ④ (행정절차 간소화) 서류 간소화, 중복절차 생략 등 불편규제* 해소

* 소규모 토석매각액 결정방법,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출서류,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등

□ 추진계획 : 현장소통 중심의 청장 직속 '규제혁신 점검단' 운영

-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운영 정례화로 확실한 규제개선 성과 창출

2 청년정책

□ 현황

- 산촌지역의 **고령화와 낮은 임가소득***으로 인해 산촌인구 지속 감소
* 임가소득 38백만원('21) : 농가(48백만원)의 80%, 어가(52백만원)의 73%
- 39개 시·군·구 단위 지원체계를 갖춘 **산림일자리발전소**가 주민공동체(그루경영체)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**산림분야 청년일자리 창출***
* '22년 현재 227개 그루경영체 중 126개 법인화에 성공, 참여 주민 1,787명 중 11.3%가 창업·취업에 성공한 20~30대 청년(202명)
- '청년정책자문위원회'를 구성·운영('22.4.1)하여 **소통 및 참여기회 확대**

□ 중점방향 : 청년이 참여하는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

- (국정과제) 일자리 맞춤형 지원,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 **청년정책 국정과제 이행**을 위한 '**23년 산림분야 시행계획*** 수립·추진
*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, 디지털숲가꾸기, 드론 활용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, 지역단위 주민공동체 창업지원 등 6개 과제 78.5억원
- (참여확대) 갈등관리·적극행정·산림교육 등 **청년참여 위원회 확대**

□ 추진계획 : 청년 눈높이 소통강화,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

- (기회확대) '**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***'를 확대 운영하여 산림분야 취·창업에 관심있는 청년층에게 **취업 및 소통 기회** 제공
* 확장 가상세계(메타버스)에서 기업 인사담당 및 청년사업가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취업 성공 특강, 일자리 홍보관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하는 박람회
- (창업지원) **청년창업경진대회**와 **산림일자리발전소**를 통한 **기술창업 전주기*** 지원으로 스타트업, 벤처기업 등 청년층 진입에 **유리한 환경** 조성
* '아이디어 발굴 → 교육·사업화 → 자금지원 → 컨설팅' 패키지 지원
- (인재양성) **산림특성화고***와 **자립준비청년**** 지원을 통한 **산림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업기반 마련**
* 임업기자재 보급, 퇴직공무원 활용(인사처 노하우플러스 사업) 연계, 임업 교과서 보급
** 산림기술자 기본 교육 → 인턴 → 취업 발전단계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